

# 전주시 지방채, 시민 위한 공공자산에 투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광역 인프라 등 필수 기반 조성 위해 활용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지방채 관련 우려와 관련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43%인 1727억 원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복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난해 6월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컸으며, 일단 개발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원 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복지 이용권과 장

기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주컨벤션센터와 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타운 등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광역 거점 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로,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관광·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투입됐다.

시는 이러한 시설들이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전반의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면서 단기적인 채무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지만 전주시의 자산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5146억원 증가했으며 기초 지자체 226개 중에 12위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 수준에 그쳐 재정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채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도시의 자산을 확보하는 투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과거 지방채를 발행한 뒤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환 구조 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의 계획이 담긴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전주시 채무 비율은 오는 2033년이면 12%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특례시 제도 개편' 대응 전략 제시

### 전주시정연구원, 정책브리프 제13호·제14호 동시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최근 특례시 제도의 개편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주시의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담은 'JIRI 정책브리프 제13호'와 'JIRI 정책브리프 제14호'를 동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JIRI 정책브리프 제13호·14호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모색하고, 향후 특례시 제도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유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최소화 △상위 정부의 안정적 재

정지원 기반 마련 △행정기구 확장 등의 개편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 부여 △공공역사 수준의 주민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주시의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 방안이 반영된 법률의 개정 △전주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 및 발굴 사무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 △상위 정부 차원의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된 재정 특례의 명확한 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제안한 전략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례시 제도와 연관된 비수도권의 주요 대도시 및 특례시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공동의 논리를 바탕으로 상위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안전보건교육

전주시는 19일 시청 강당에서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근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소개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조성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부장이 강사로 나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안전보건 기본 수칙 △위험 요소 파악 및 관리법 △응급상황 시 대처법 △안전한 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전주 첫마중길 환경정비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 △은두레공동체 공유공간 관리 사업 등 총 50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100명의 근로자 중 77명이 현업종사자이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 현장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 주를 이루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 안에서 사고 없이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 속으로 '연두순방'

### 3월까지 35개 동 순회... 시청 운영방향 공유·시민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대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 나선다.

우범기 시장은 오는 22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35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시장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2026 연두순방'을 진행한다.

이번 연두순방은 기존 동별 특장 장소에서 진행되는 강연 형식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과 현장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두순방은 각 동별로 △자생단체회원 티타임 △사회복지시설 방문 △주요 현장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동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장의 경우 동별 숙원사업 현장이나 민생경제 현장 등 동별 특색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대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모습.

특히 올해 연두순방은 약 50~100명이 운집한 상황에서 진행될 기존 대화 방식보다 더욱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 순방 행사인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248건의 시민 요구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시는 현재까지 49건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62건의 요구사항을

추가 완료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굳은 각오와 절실함으로 전주 성장과 미래 지도의 관을 획기적으로 바꿔왔다"면서 "전주시의 이러한 행보는 현명한 전주시민의 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번 2026년 연두순방에서는 곳곳의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무주택 서민 임대보증금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이며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하천 내 공중화장실 지속 확충 나서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하천 내 공중화장실을 꾸준히 확충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천 추천대교 인근 등 2곳에 하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전주천 5개소 △삼천 4개소 △아중천 1개소 등 총 10곳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시는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용역을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적용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